



미국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손민숙 연구원

연구

공공건강보험 확대의 문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주요 사안이었으며,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임. 미국 비영리단체 KF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다수가 공·사적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우려함. 반면, 오바마케어 또는 Medicare-for-all와 같은 공공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고루 존재함

■ 의료비용 문제는 미국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최근 하버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인파산의 원인 중 1위가 의료비용임(66.5%)¹⁾
 - 다만 오바마케어의 도입 이후에도 개인파산 원인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 개인파산자의 78%가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파산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공공건강보험 확대의 문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주요 사안²⁾이었으며,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임

- 주요 쟁점은 워싱턴의 부패(30%), 건강보험 문제(27%), 경제 및 일자리(25%) 순임
-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문제 중에서도 의료비용(27%)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그 외 건강보험 관련 쟁점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9%), 보편적 보장(8%), 노인 보장(7%), 약값(7%) 등이 있음
- 지난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³⁾를 위헌으로 판결하였음
 - 2018년 12월 14일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017년 세제개편 법안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1) CNBC(2019. 2. 11), "This is the real reason most Americans file for bankruptcy"

2) KFF(2018. 9. 5), "KFF Health Tracking Poll(conducted August 23-28, 2018)"

3) 건강보험개혁법; 미국의 저소득층까지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법안

부과하는 벌금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의무가입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ACA는 위헌이라고 판결함
 - 위헌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임

■ 미국 비영리단체 KFF(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설문조사⁴⁾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다수가 공·사적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우려함

- 공적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의 87%(매우 우려 49%, 약간 우려 38%)가, 사적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88%(매우 우려 58%, 약간 우려 30%)가 우려함
-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은 공공건강보험 제도의 실행에 따른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73%(매우 우려 41%, 약간 우려 32%)가 우려를 표함

■ 반면, 오바마케어 또는 Medicare-for-all⁵⁾와 같은 공공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고루 존재함

-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부 주도의 공공건강보험에 56%(강한 긍정 34%, 약한 긍정 22%)가 찬성하며, 42%(강한 부정 32%, 약한 부정 10%)가 반대함⁶⁾
-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50%가 찬성, 39%가 반대하였으며, Medicare-for-all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56%가 찬성, 39%가 반대함⁷⁾
 - 오바마케어 찬성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 80%, 공화당 지지자 17%이며,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 10%, 공화당 지지자 75%임
 - Medicare-for-all 찬성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 78%, 공화당 지지자 24%이며,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 17%, 공화당 지지자 75%임
- 공공건강보험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건강 보장은 권리이며(47%), 의료비용의 과도함을 해결해야 함(17%)을 근거로 함⁸⁾
 - 특히, 전국민을 포용하는 것(89%)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반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부 개입 반대(23%), 실행비용의 과도함(14%), 소비자 선택 및 경쟁 제한(14%)을 근거로 함 **kiri**

4) KFF(2018. 9. 5), "KFF Health Tracking Poll(conducted August 23-28, 2018)";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함
 5)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대중에게 확대하는 제도임
 6) KFF(2019. 1. 23), "KFF Health Tracking Poll(conducted January 9-14, 2019)";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1,19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함
 7) KFF(2019. 3. 26), "KFF Health Tracking Poll(conducted March 13-18, 2019)";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1,21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함
 8) KFF(2019. 3. 26), "KFF Health Tracking Poll(conducted March 13-18, 2019)"